

##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정책연구과제명	문재인 정부의 2018 대북정책 방향	연구기관/책임연구원	북한연구학회/ 서보혁
부서/과제담당관	정책기획과/ 정책기획과장	담당공무원	박해숙 사무관
연구 방식	1. [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] 위탁형 용역	2. [ <input type="checkbox"/> ] 공동연구형 용역	3. [ <input type="checkbox"/> ] 자문형 용역
연구자 선정방법	1. [ <input type="checkbox"/> ] 일반경쟁계약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[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] 수의계약		
연구 기간	2018.02.22. ~ 2018.05.09.    (2.5개월 )		
연구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연구는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등 남북관계 개선 계기,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정책 전략과 방향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음.</li> <li>○ 또한, 4·27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 등 최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였으며, 비핵화·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남북·북미대화 병행 전략 등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도 연구하였음.</li> <li>○ 특히 대북정책 추진 전략을 판문점 선언과 연계, 정치·군사적 신뢰구축, 경제협력, 인도주의 협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.</li> </ul>		
평가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당면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전환기적 시점에 비추어 정책연구의 목적과 연구결과의 부합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.</li> <li>-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결과가 북미관계의 함수라는 점을 적확하게 지적하면서 정책제언의 기본 틀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음.</li> <li>-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후 과정의 과제에 대해 잘 요약하고 있는 반면,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위험(군사적 옵션의 부상 및 긴장의 고조)에 대처할 정부의 플랜 B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.</li> <li>-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정치적·외교적 난관에 대해서도 유형화시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</li> <li>- 북미화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이 분단평화에서 통일평화로 이루어진다는 구상은 흥미롭지만, 당위적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는 장기공존 및 두 주권국가의 상호승인이라는 가능성 또한 열어 두고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.</li> </ul> </li> <li>• 추진방법의 적절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 정부의 진행 중인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제언을 수립하는 연구의 속성 상 독립적인 연구기관에 속해 있는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팀의 연구과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지적할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.</li> </ul> </li> <li>•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방식 및 연구기간과 관련한 계약 내용을 충실히 수행한 점에서 지적할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.</li> </ul> </li> <li>•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(필요시 표절검사 전문업체 의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기할만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.</li> </ul> </li> </ul>		

<별지 제6호 서식>

평 가 결 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북정상회담 직후까지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환경 변화 및 주요 행위자의 대응과 관련하여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국제 및 한반도 관계의 구조적 변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.</li> <li>- 시간적 한계 상 보다 최근의 변화(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연기 및 북한의 저자세 대응)가 가져온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새로운 투입변수의 문제를 고려하여 활용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.</li> <li>- 현 시점에서 북한이 협상과 관련한 인내심(patience)가 낮다는 점이 드러났고, 그 결과 협상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정상회담 의제설정과 관련한 북미교섭의 최대 변수는 미국의 전략적 자제 (strategic restraint) 여부라는 점이 단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.</li> <li>- 협상력이 낮아진 북한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최대한 세밀하게 타결하여 미국의 자의적 해석 및 집행을 제어라는 구속력 있는 커미트먼트(commitment) 기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</li> <li>-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양보를 강요하는 경우 의제설정 과정에서 북한이 이탈할 위험이 있고, 합의에 이른다고 하여도 이행 과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자제 및 정치적 목표의 명료화가 합의 및 이행에 관건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정부 정책에 활용되어야 함.</li> </ul> </li> </ul>	
평가자 확 인	구 분	평가전문위원	과제담당관
	성 명	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 정	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장 구병삼